

구윤철 “중동 긴장 재고조… 에너지 수급·공급망 관리 만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비상경제본부회의, 장관회의 주재
원유·나프타, 지난해 이상 물량 확보
석유류 최고가격제 세부 검토 착수

미국-이란 간 잦아진 무력 충돌에 정부가 대응 수위를 다시 높인다. 국제 공급망 불안이 재차 대두될 가능성에 맞서 석유류 등의 선제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로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특히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유와 나프타의 경우 8월까지 지난해 수준 이상의 물량을 확보했고 나프타 파생상품 등 핵심품목 재고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향후 불확실성이 큰 만큼, 그간의 수급 안정 조치를 유지하고 추가 방안도 선제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류 최고가격제(가격 상한)와 유류세 인하 조치 등에 대한 세부 검토에 다시 착수했다.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 점검 ▲여수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

현황 및 지원패키지 ▲건설공사 전자대금 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 ▲3대 메가 프로젝트 연구지원단 구성·운영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경제의 구조 혁신을 통한 새로운 원동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구 부총리는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산업은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특히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는 등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소득 5만불 달성을 위한 방안들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발표한 ‘대산 1호’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프로젝트에 이어, 두 번째 사업재편 계획인 ‘여수 1호’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본격화한다.

구 부총리는 “노후 NCC(나프타분해시설) 설비 2기 가동을 중단해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고부가·친환경 전환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했다. 정부는 재무구조 개선에 5450억 원을 증자하는 등 자구노력과 함께 고부가 전환·인프라 구축 등에 253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여수1호의 성공적 사업재편을 위해 채권단과 함께 7000억 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를 구상 중이다.

아울러 고부가 전환 신규자금 등 4500억 원의 금융지원을 비롯해, 수입자금 대출보증을 20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

이다. 구 부총리는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공사의 다단계 도급구조도 개선하고, 임금·대금 체불이 없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발주자가 대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이 다시 하수급인에게, 또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맞춰, 발주자가 하수급인·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편해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책연구기관 합동으로 전담 연구지원단을 구성해 정부 정책 수립과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반영한 프로젝트별 기술지원 전담반(TF)을 꾸리고, 경제·사회 각 부문과 연계한 발전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여수 석유화학 사업 재편… 정부 7000억 투입

산업부, 4개사 사업재편계획서 승인
5450억 유상증자로 여천NCC 부채 상환
향후 신설통합법인 설립 절차 완료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중심지인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글로벌 시장 약화와 공급과잉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이 추진된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여천엔씨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디엘케미칼 등 4개사가 공동으로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전달(20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은 각각 보유 중인 폴리에틸렌(PE), 접착·도료용 수지 등 다운스트림 사업 부문을 현물출자한다. 이와 동시에 롯데케미칼은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의 나프

타분해시설(NCC)과 PE·PP(폴리프로필렌) 등 기초소재 사업을 물적분할하여 여천엔씨씨와 통합, 신설통합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여천엔씨씨의 주주사인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은 총 5450억원(각 2725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여천엔씨씨의 기존 부채를 상환하기로 했다. 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배관 및 인프라 구축, 고부가 제품 전환 등 사업재편 이행을 위해 총 2532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총 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 세제, 인허가,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7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이번 사업재편 가동을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 분할·합병과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와 지방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사업재편 기업이 중복자산을 가동중단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받는다. 또 국제청사전 담면 제도를 통해 적격합병에 대한 세법 해석을 요청할 경우 최대한 신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참여 기업들은 향후 기업 간 합병 관련 계약체결 및 이사회 승인, 기업분할 및 합병 절차 등을 거쳐 신설통합법인 설립 절차를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날 사업재편승인기업 4개사 대표가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재편 프로젝트를 끝까지 추진한 모든 기업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사업재편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농협 쌀 사용을 인증받은 프랑스 파리 지역 한식당 ‘한옥’

유럽 내 농협쌀 사용 한식당, 20곳으로 확대

‘해외 한식당 농협 쌀 인증제’
20호점 인증패 수여식 열어

농협중앙회는 국산 농협 쌀을 사용하는 해외 한식당이 총 20곳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농협은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해외 한식당 농협 쌀 인증제’ 20호점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20호점은 파리 시내 국립기대동양박물관에 입점해 있는 ‘한옥’(HANOK)이다.

해외 한식당 농협 쌀 인증제는 해외 한식당에 국산 농협 쌀 사용을 인증하는 사업이다. 1호점인 파리 한식당 ‘순 그릴 샹젤리제’를 시작으로, 작년년부터 파리 중심가 주요 한식당들이 참여했다. 시행 1년여 만에 인증 한식당 20호점을 배출했다.

이번 성과에 대해 농협은 “3년 연속 프랑스에 고품질 담양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했다”며 “일반 소비자(B2C)를 넘어 현지 외식업체(B2B) 중심으로 수출 기반을 확대할 결과”라고 평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김성환 기후장관, 산업계 탄소중립·순환경제 현장 행보

삼성물산 주거성능연구소 등 방문
냉난방 일체형 히트펌프 점검하고
냉매 처리·회토영구자석 현장 확인

정부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내 주요 기업의 핵심 기술 실증 현장을 찾고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장관이 22일 경기도 소재 삼성물산 주거성능연구소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업체인 수도권자원순환센터 등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 장관은 삼성물산 주거성능연구소를 찾아 ‘냉난방 일체형 히트펌프’ 실증 현장을 점검했다. 일체형 히트펌프는 외기의 열을 활용해 냉방과 난방, 온수를 하나의 설비로 공급하는 고효율 전기화 설비로, 건물 내 화석연료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기후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2일 경기 용인시 삼성물산 주거성능연구소를 방문해 히트펌프 실증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는 이번 현장 점검에서 파악된 설치 여건과 제도적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공동주택 내 히트펌프 보급을 위한 정책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는 사업장 내 22개 모든 카페와 구내식당에서 다회용기를 전면 도입한 선도적 사례를 격려했다. 현재 이 모델은 삼성전자뿐만 아니

라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등 총 13개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 공급·회수 과정을 세밀히 살펴 다중이용시설의 다회용기 전환을 촉진할 힌트를 얻겠다는 구상이다.

이후 김 장관은 용인 수도권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인 냉매의 적정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구리·알루미늄을 비롯해 친환경 가전의 핵심 부품인 ‘회토영구자석’을 분리·선별하는 순환경제 규제 특례 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올해 5월부터 LG전자와 이순환거버넌스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영구자석 회수 실증사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기후부는 폐가전에서 네오디뮴 등 희토류가 함유된 영구자석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본 사업의 실증 결과를 토대로, 관련 재활용 기준을 개선하는 등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업부, 지방정부와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실무협의회 열어 가이드라인 설명

정부가 지방정부와 손잡고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할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역별 지방정부가 참석하는 ‘성장엔진 육성계획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성장엔진 육성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은 향후 성장엔진이 최종 선정되면 지방정부가 지역 내 앵커기업과 공동으로 수립할 ‘중장기 성장엔진 종합육성계획’의 실무 지침서다.

해당 계획에는 지방정부의 ▲앵커기업 투자유치 전략 ▲성장엔진 육성 비전 및

로드맵 ▲투자 촉진과 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과제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이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앵커기업, 지역혁신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권역별 주요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향도 소개했다.

정부는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재정, 금융, 세제, 규제, 기술, 인재, 인프라 등 7개 분야의 지원책을 맞춤형으로 묶어 제공하는 ‘7대 정책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 투자와 연계해 과감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메가특구법’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결집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